# 두달 멈춰 선 목포 시내버스 정상 운행

## 업체 대표 담보 제공 가스비 해결
## 땜질 아닌 근본적인 대책 목소리
## 시, 준공영제 전환 공청회 추진

목포시 시내버스가 운행 중단 두 달여 만인 14일 운행을 재개할 예정인 가운데 시민들의 대중교통 체계 개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태원여객 시내버스 모습. 〈목포시 제공〉

버스회사 측의 가스비 미납으로 운행을 멈춰선 목포 시내버스가 운행 중단 두 달여 만에 운행을 재개할 예정인 가운데 한겨울 큰 불편을 겪은 목포 시민들의 대중교통 체계 개편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내버스 회사인 태원여객·유진운수의 이한철 대표는 13일 목포상공회의소에서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14일부터 시내버스를 정상운행하겠다"고 밝혔다.

시내버스회사가 지난해 12월 12일부터 가스비 25억 원 상당을 미납해 목포도시가스로부터 가스 공급을 받지 못하는 등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된지 65일 만이다.

이 대표는 이날 "그동안 대중교통 운행을 중단해 이용객들에게 교통 불편을 드려 대단히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지난해 노사간 임금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지 못하면서 파업으로 인한 운행중단이 발생했다"며 "대내외적으로는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서 천연가스가 천정부지로 급등해 가스사용료 미납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돼 시내버스 운행을 멈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목포시내버스 운행중단이라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14일부터 목포 시내버스를 정상 운행해 그동안 교통불편을 드린 점을 해소함은 물론 시민의 발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목포 시내버스가 시민들 곁으로 더욱 다가가서 이용객들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전 종사원들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시내버스 운행이 정상화 된다는 소식에 목포시민들은 일단 환영 의사를 보이면서도,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대중교통 체계 개편을 촉구했다.

특히 시민들은 사실상 시내버스 독과점 체제를 방치해 화를 키운 목포시에 대해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운행 정상화 함께 목포시는 시내버스 완전공영제·준공영제 등 전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목포시는 현재 시내버스 노선 개편 용역과 준공영제 용역 등 2건의 용역을 진행중으로, 오는 5월께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대중교통 개편안 마련에 나선다.

또 시는 23개 동 전체를 대상으로 시민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대중교통 개편안에 시민들의 의견을 담을 계획이다.

윤병종 목포시 교통행정과장은 "용역 결과와 시민공청회, 시의회 토론회 등을 거쳐 오는 7, 8월께에는 대중교통 개편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시내버스 운행중단 사태를 교훈 삼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대중교통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

# "응급안심서비스 지원 대상자 확대해야"

## "고독사 많은 중장년층도 포함"
## 오미화 전남도의회 의원 제안

오미화 전남도의회 의원(진보당·영광2·사진)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 의원은 최근 도의회 보건복지국 업무보고에서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가정에 활동 감지센서와 화재·가스 감지센서 등을 설치해 응급상황이 발생되면 소방서와 응급관리요원에게 자동으로 전달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해당 어르신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독사 2명 중 1명은 50~60대의 중·장년층 남성으로 보고됐다"며 "응급안전안심서비스지원 대상이 아닌 중·장년층 독거인은 응급상황에 대비하는 장비를 설치하고 싶어도 개인적 설치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서비스 제공의 취지가 고독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인데 50~60대의 중·장년이 지원 대상자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고독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전남도에서 지원 대상자를 확대해 혼자 죽음을 맞지 않도록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 신안소방서 전기자동차 안전수칙 홍보

## 화재 예방 완속 충전 등 권고

신안소방서가 신안군이 탄소중립을 위해 환경친화적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추진함에 따라 전기자동차 안전수칙 홍보에 나섰다.

신안군에는 현재 67개소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안소방서는 앞으로 신안군이 주민들이 전기자동차 구매 때 탄소중립차원에서 200만~4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전기자동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데도 농어촌주민들이 아직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안전수칙 홍보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전기차 화재 원인은 외부충격, 배터리 결함, 과충전 등이다. 특히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열폭주 현상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순식간에 내부온도가 800도에 이르러 진화작업에 장시간 소방력이 투입되고 진화하더라도 재발화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신안소방서는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시 적절한 대처방안과 관계법령이 아직 갖춰지지 않아 무엇보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등에서 안전수칙을 지켜 화재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급속충전보다 배터리에 영향이 덜 가는 완속으로 충전하고 충전전원 차단 시 강제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 충전기 커넥터와 충전 소켓 부위의 물기가 있을 때 사용을 금해야 하며, 운전자는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시 즉각 소방서에 신고하고 반드시 '전기자동차 화재'라고 말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관계기관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규 설치 땐 지하주차장을 피하고 되도록 지상에 설치할 것을 권장했다.

박연호 신안소방서장은 "섬 주민들이 아직 전기자동차 안전수칙에 대해 숙지를 못 하거나 무심하게 운전하다 봉변을 당할 수 있어 안전수칙을 꼭 지켜 사고 예방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 목포시 청년 연령, 39세→45세 상향

## 청년발전 조례 의결…내년 시행

목포시의 청년 연령 상한이 39세에서 45세로 상향된다.

목포시의회는 유창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등이 최근 제38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목포시 청년의 나이 상한을 45세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포 후 2024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 조례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확대해 소통과 참여의 기회를 높이고,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추진해 청년이 다시 찾는 목포를 만들기 위한 취지이다. 기존 목포시 청년연령을 '19세 이상~39세 이하'에서 '19세 이상~45세 이하'로 하는 변경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청년의 연령 상한을 45세로 개정 추진하면서 중장년의 연령도 '46세 이상 64세 이하'로 변경하는 조례를 함께 개정했다.

유창훈 의원은 "왕성한 사회경제적 활동을 하려는 40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들이 목포시에 추진하는 각종 청년 지원사업에 수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한다"면서 "청년이 찾는 목포를 만들기 위한 연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목포시의 청년인구는 5만 2445명으로 개정된 조례가 적용되면 2만 961명이 추가로 청년 연령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다.

유 의원은 "조례개정에 발맞춰 조례가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예산편성과 사업 추진계획에 확대된 나이를 반영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다양한 지원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 목포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10만원 목포상품권으로 지급

목포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오는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축하금 1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목포시의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은 민선8기 공약 중 하나로, 시는 사업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지난해 11월 이행한데 이어 최근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지원대상은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실제 체류 중인 초등학교 최초 입학자이다. 지원신청은 부모나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가 3월 중순부터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축하금은 자격 확인 후 지역화폐인 목포사랑상품권 카드로 지급되며, 올해 말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무안군 관계자들이 현경면 동산마을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의 건강상태에 따른 맞춤형 통합건강관리 프로그램인 '효사랑 경로당 방문'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무안군 제공〉

# 무안군, '경로당 방문 통합건강관리' 운영

## 9개 읍·면 매월 2회 건강 서비스

무안군이 최근 현경면 동산마을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 어르신들의 건강상태에 따른 맞춤형 통합건강관리 서비스를 운영했다.

군은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으며 생활양식 변화 등에 따라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유병률이 늘면서 만성질환에 대한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9개 읍·면 경로당을 월 2회씩 방문해 '효사랑 경로당 방문 통합건강관리'를 운영할 계획이다.

기초검사 측정(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의사 건강상담,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 낙상예방 및 근력강화를 위한 스트레칭, 관절통증 완화를 위한 테이핑 요법 등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어르신들의 다양한 건강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치과 이동진료, 인지선별검사(CIST)를 활용한 치매 조기검진, 우울증 선별검사 및 정신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해 어르신들 건강상태에 따른 맞춤형 통합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산 무안군수는 "생활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통합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

# 신안군, 66억 투입 어르신 2270명에 일자리

## 공익형·사회서비스형 15개 사업

신안군이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과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

신안군은 올해 군비 6억원을 포함 총 6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어르신 227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경로당 청소도우미 등 공익형 9개 사업과 사회서비스형 6개로 추진된다. 공익형 참여자는 월 30시간 27만원과 사회서비스형은 월 60시간 71만원의 활동수당을 받는다.

군은 14개 읍면별로 사업 참여자에 대한 노인 일자리 발대식과 안전교육 등을 실시 후 일자리사업을 12월말까지 추진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안전한 환경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 진도군 귀농산어촌 어울림마을 2개 마을 선정

## 사업비 3000만원 확보
## 군내면 금성·임회면 고산마을

진도군이 군내면 금성마을, 임회면 고산마을이 귀농산어촌 어울림마을 조성사업에 선정돼 마을당 1500만원 등 총 3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귀농산어촌 어울림마을 조성사업은 귀농어귀촌인과 지역주민 갈등 해결을 비롯 따뜻한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해 특색있는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마을 입구 등에 조형물 설치와 조경수, 꽃 식재, 귀농어귀촌인과 마을주민들 사이에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프로그램 등을 추진한다.

진도군 인구정책실 관계자는 "특색있는 마을별 경관 조성과 소통의 장 마련으로 귀농어귀촌인과 지역주민 사이에 마음의 벽을 허물어 귀농어귀촌인이 오고 싶고, 살고 싶은 마을로 만드는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